

23노무 행정쟁송법 점수차이 부분 - 월비스 이승민 쌤

시험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쟁은 특성상 거의 모든 강사가 쟁점은 찍을 수 있습니다.(이 점은 매년 생기초 특강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속지 말자~)

따라서 일반론 판례 사안해결을 실제시험장에서 누가 충실히 썼는가가 고득점을 좌우합니다.(*점수차이 부분은 *점수차이=빨간색으로 표시)

아래 예시답안은 사건이니,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언제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상세 영상해설은 유튜브 이승민 콧 행정법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목차중 1.문제의 소재는 생략합니다.

문1-1

- 2차 거부의 처분여부, 기간/*23-2기-1회 창작 모의 문제와 완전 동일 문제

2. 1 2차 거부의 처분 여부

1) 거부의 처분성 요건

- 이 부분 생략하신분 의외로 많을 것- *점수차이

2) 2차 거부의 처분성

- 수업중 강조한 최근 판례 부각 서술- *모르면 점수차이

3. 제소기간

1) 의의 취지

2) 안날-20조1항

- 설문상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안쓰면 점수차이

4. 사안 해결

1) 1차거부처분의 경우

갑은 공토법령상 신청권이 있고, 대상자 선정이 거부되면 갑에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갑의 재산권에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바 처분이다. 따라서 1차 거부처분이 대상이고, 6.28. 통보되었으므로 20조1항 본문에 따라 기산점은 이날이 된다.

2) 2차거부처분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갑이 이의신청시 각종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것은 새로운 내용의 신청이므로 2차 결정은 2차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2차 거부도 처분으로 대상이 되고, 8.31. 통보되었으므로 기산점은 이날이 된다.

문1-2 - 재처분의무 /무효소송 간접강제

2. 기속력 중 재처분의무-30조2항

- *일반론 충실히 못 쓰면 점수 차이

- 대상자 선정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재처분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각 행위의 재처분의무 부분이 가장 중요 -*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점수차이 / 다만 대상자 선정을 기속행위로 볼지 재량행위로 볼지는 논리만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3. 무효확인소송에서 간접강제의 인정여부

4. 사안 해결

1)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A가 부담하는 의무는 30조2항에 따라 위법을 시정한 재처분의무이다. 대상자 선정이 기속행위이므로 A는 갑을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부정설에 의하면 38조1항에서 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A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은 간접강제로 구제 받을 수 없다.

문2- 25점

기존업자 병의 경업자 소송 원고적격 인정여부- 무난한 문제이므로 점수차이 없을 듯 합니다.

문3- 25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쟁점을 모르거나, 내용이 부실해서 점수차이 가장 큰 문제일듯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기준 등- *안쓴 분 많아 점수차이 클 듯

3.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유형과 상대방

*최근 판례(특강에서 강조) 모르면 점수차이

4. 납부 보험료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유형과 상대방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다수설은 공권설 /판례는 사권설 - *학설 안쓰면 점수차이

5. 사안 해결

1) 3의 채무는 건강보험법이 공법이고 이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공법상 의무이다.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이다. /상대방은 국가사무가 국민..공단에게 위탁된 것이므로 공단은 2조2항에 따라 행정청이고 법주체는 국가인바 39조에 따라 국가가 된다.(*이 부분이 어려우므로 점수차이)

2) 4는 다수설인 공권설에 의하면 1)과 동일하다. /다만, 판례인 사권설에 의하면 민사소송이고, 상대방은 민사소송도 법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국가가 된다.

*맺음말

항상 성원해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쟁송 고득점=쉬운 합격을 목표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